

## 애물단지 전략 '스카이큐브' 정원박람회 유치 흠집내나

순천시, 상사중재원 권고 수용여부 20일까지 밝혀야

2023년 개최 위한 국제원에생산자協 현장실사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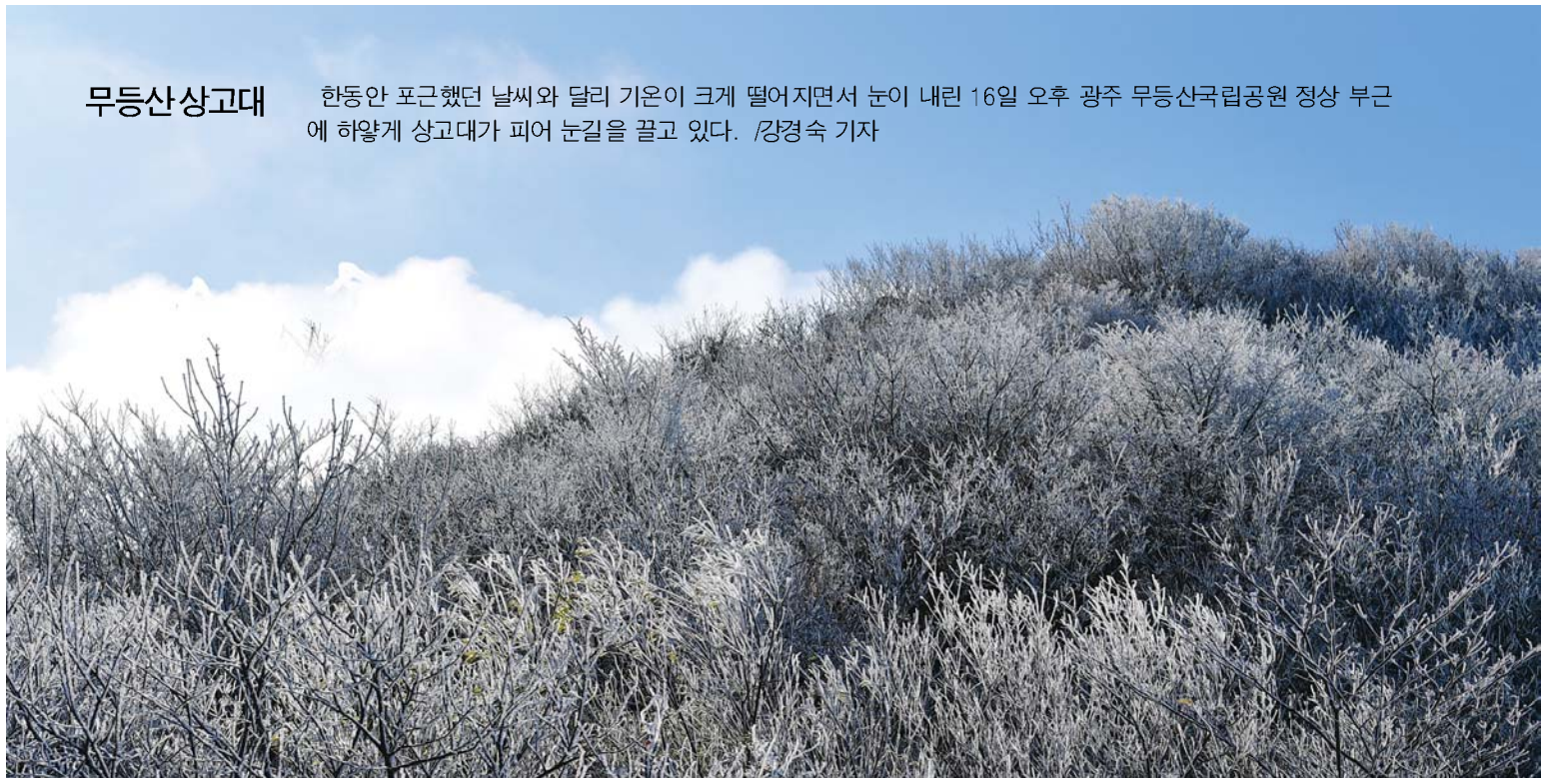
순천시가 '2023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나섰으나 박람회 주무대인 순천만습지 내 '스카이큐브' 갈등이 1년째 이어지면서 결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운영업체의 제소로 순천시가 1천300억원대 소송에 휘말리면서 자칫 박람회 유치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스카이큐브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4.62km 구간을 운행하는 소형 무인궤도열차(PRT·Personal Rapid Transit)다. 운영업체는 포스코의 자회사인 에코트랜스이며,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에 맞춰 개장해 30년동안 운행한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순천시와 2011년 협약을 맺었다. 궤도차량 40대를 도입하고 관리동과 정류장 2곳을 설치하는 등 초기 시설비만 620억원이 투입된 스카이큐브는 애초 계획과 달리 박람회 이듬해인 2014년 4월에야 실제 운행에 들어갔으며, 협약 초기 연간 1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연평균 30만명 수준에 머물면서 손익분기점인 80만명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반복돼왔다. 결국 업체 측은 만성 적자를 이유로 지

난해 운영중단을 선언하고 순천시가 2011년 맺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투자비용 분담금 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수의 1천300억원 등 총 1천367억원을 보상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소했다. 순천시와 에코트랜스가 맺은 협약서에는 스카이큐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습지 주차장을 없애고 궤도열차 이용료를 입장료에 포함시켜 통합 발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적자가 발생하면 순천시가 투자비용부담금 명목으로 지원토록 했다. 에코트랜스 관계자는 "스카이 큐브 가동이후 5년간 쌓인 적지만 200억원에 달한다"면서 "운영 중단의 책임은 2011년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순천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순천시는 적자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협약서 내용 중 독소조항은 삭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협약서 중 입장료 통합발권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어 2013년 7월 수정하기로 했는데 업체 측이 은행권 대출을 쉽게 하기 위해 최종 협약서를 고치지 않았다"며 "사업 실패의 책임과 기업의 미래 이익까지 고스란히 순천시에 떠넘기는 행태는 거대기업 포스코의 횡포"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정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업체가 계속 스

카이큐브를 운영하는 방안과 순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화해권고안으로 제시했으며, 순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상사중재원에 입장을 내야 하는 순천시는 어떤 방식이든 시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국제박람회 승인기구인 국제원에생산자협회(AIPH)의 현지실사까지 마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도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상사중재원은 순천시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에코트랜스 측에 수용 여부를 물어 갈등을 조정하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자적인 판정을 내린다.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단심제인 만큼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다. 김경숙 기자



무등산상고대 한동안 포근했던 날씨와 달리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눈이 내린 16일 오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부근에 하얗게 상고대가 피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경숙 기자

## 막오른 경선전... 광주·전남 총선 정국 본격화

4·15 총선 D-58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아권의 수성과 여당의 텃밭 탈환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레이스에 막을 올리며 4년 전 녹색바람에 무너졌던 명예 회복에 나섰다. 아권은 호남권 중심 통합 신당 출범이라는 승부수를 띄우며 사활을 걸고 있다.

1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에 들어가면서 예비후보들의 막판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 속에서 당내 경선에 쏠린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경 경선을 통한 바람몰이로 지지세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략·단수공천을 최소화하고 불·탈법과 네거티브에는 엄정 대응하면서 지역민들의 지지세가 오는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경선이 차려지면서 후보간 줄세우기와 평가르기가 난무하고 불법 당원 모집, 고소·고발 등의 잡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고심이 커지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이슬 기자 <2면으로 이어짐>

## 이개호, 광주·전남 최우수 의원 입증

4년동안 국회 본회의 법안투표 참여율 압도적 1위  
의정활동 척도 '상임위원회 출석률'도 100% 육박

이개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율과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평소 이 의원은 지역구 활동도 매우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두 차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개호 의원은 20대 국회 4년동안 법안투표 의무 횟수 1천851회 가운데 1천631회를 투표해 88.11%의 법안 투표율을 기록했다.



위원회 출석은 국회의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의정활동이다. 따라서 법안투표 참여와 상임위 출석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얼마나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온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이 의원이 20대 국회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기록이자 광주·전남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 참여율과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한 것은 평소에도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개호 의원의 성실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이개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법안 투표, 상임위 출석은 국민의 의사를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그 어떤 의정활동보다 중요하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임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숙 기자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 위해 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